

# G-Welfare Weekly Report

## 01

###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## 1. 노동계, 「노동시간임금 줄여 청년고용 늘리자」 제안

##### 01 주요 내용

- 통계청의 '17년 2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, 실업률은 5.0%, 청년실업률은 12.3%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운수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여 청년고용을 늘리자는 정책을 제안
  - 청년실업률은 2015년 2월(12.5%)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,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10차례의 정책, 67개 청년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
  - 이에 민주노총, 운수노조 등 노동계는 청년실업의 해결 대안으로 '노동시간·임금을 줄여 청년고용을 늘리자'는 정책을 제안
- 제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폐지와 교대제 개편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(주 40시간 준수)하고,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축소 등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나누는 것
  -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는 현행 '근로기준법 제50조'에서 명시하고 있고,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, 노동계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현행법 침해의 소지는 적으며,
  -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(663만 명)에게 주5일 40시간 근무를 적용하면, 개인당 노동시간이 3~4시간 단축되면서, 새로운 일자리가 51만개~70만개 창출 가능\*
- 이번 노동계의 제안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고, 청년의 노동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의가 크다는 평가
  - 노동계의 제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고, 이를 통해 '잠재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기본권 확대' 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
- 그러나, 노동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등이 청년고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선행, 유관정책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 관련 과제들의 선결 논의가 필요
  - 노동시간 단축에 대하여 실질사용자(기업), 정부, 근로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, 관련 제도의 시행이 청년고용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'청년고용할당제', '청년우선고용', '청년고용증대세제\*\*' 등의 제도와 병행하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
  - 특히,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제도 도입을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, 제도 불이행에 따른 출자·출연금 삭감, 경영평가 등급 1단계 하향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

\*한국노동사회연구소 (2017년 2월) 「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보고서」

\*\*청년고용증대세제: 청년정규직을 전년보다 더 채용한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

##### 02 경기도 시사점

- 경기도는 경기도 26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청년고용 시범 사업 추진, 경영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 추진
  - 특히,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등 특별공급물량 우선 신청자격 부여, 청년통장 등 고용 외 청년지원 정책과 연계 및 확대 필요

## 2.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주거비 부담 1.5배 가중

### 01 주요 내용

- 주택의 임대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1.5배 는다는 한 일간지 조사결과\*가 발표
  - 최근 2년간 서울의 월세 전환(半 전세 포함) 아파트 4,637채를 전수(全數)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학군이 좋은 지역일수록 '전세의 월세화(化)' 현상이 두드러졌고,
  - 또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재계약한 세입자는 단순히 전세금을 올려주는 경우에 비해 임대료를 사실 상 53%정도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됨
- 이같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거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8일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「2017년 주거종합계획」\*\*을 발표
  - 공공임대 등 총 12만호 공급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, 버팀목 대출 등 전·월세 주거비 지원 강화, 월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(RIR)이 30%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
  - 여전히 하드웨어인 주택공급에 집중되어 있고, 빚내어 주거비를 충당하라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주택을 소유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
- 대선주자들은 서민 주거복지강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총부채상환비율(DTI)\*\*\*\*, 담보인정비율(LTV)\*\*\*\*\*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
  - 민달팽이유니온, 전국세입자협회 등 16개 주거관련 시민단체는 뉴스테이 폐지,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혁, 주거취약층에 대한 주거복지 대폭확대, 주택임대차 안정화, 실수요자 중심 주택분양제도 개선, 주택금융 및 주택관련 세제 정상화 등이 필요함을 주장\*\*\*\*\*

〈표〉 대선주자들의 주거복지공약 주요내용

대선주자	주요내용
문재인	월세소득 과세강화·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담을 늘려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.79%에서 1.0%까지 올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/ 전월세상한제/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긍정적
안희정	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. 행정수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. 후분양제 긍정 검토/ 전월세상한제/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
이재명	토지자산에 비해 종합부동산세·재산세 적음 → 국토보유세(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둬)신설하여 전 국민에게 연30만원 '토지배당' 을 지급 전월세상한제/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
안철수	국민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정책금리 이하 자금을 지원하는 희망임대주택 조성 공공임대주택(5.8%) 비율을 OECD 평균수준(8%)으로까지 올림 전월세상한제/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긍정적
유승민	총부채상환비율(DTI)과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 등의 규제를 강화
남경필	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(따복하우스) 15만호 조성/ 입주가구의 보증금 이자 지원 및 자녀출산에 따른 이차지원확대 (저출산 문제 극복)
심상정	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로 올리기/거래세 중심에서 부유세 중심으로 세제 개편

### 02 경기도 시사점

-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입 등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
  -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보증금·임대료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인상액 상한선 두는 제도이며,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제도

\*조선일보 (2017.3.16) "전세를 월세로 바꾸면... 세입자 부담 1.5배 는다"

\*\*주거기본법 ('15.12.23 시행) 제정에 따라, 기존 주택종합계획 ('03~)을 '16년부터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(주거기본법 제5조)

\*\*\*총부채상환비율 DTI[Debt To Income]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

\*\*\*\*담보인정비율 [Loan To Value ratio] 자산의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금액 비율로,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

\*\*\*\*\*연합인포맥스 (2017.3.14.) "조기 대선 코앞인데.. 주택공약 안보인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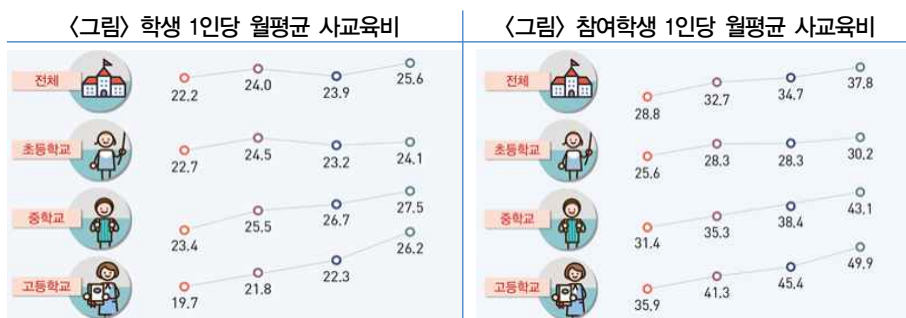
### 3. 사교육비 총 규모 약 18조 6백억 원, 역대 최고치 기록

#### 01 주요 내용

-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약 18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\*이고 증가폭도 사상 최대
  -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초등학교 7.7조원(2.9% 상승), 고등학교 5.5조원(8.7% 상승), 중학교 4.8조원(8.2%감소) 순으로 나타남
  - 국·영·수 등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 감소(2.8%감소)했으나 예체능 및 기타 등이 4조6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(15.6% 증가)해 사교육비 총 규모를 견인
  -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 18조 6백억 원으로 전년보다 2,300억원(1.3%)늘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사상 최대
  - 특히 학생수가 1년 전보다 20만 명이 넘게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규모는 오히려 증가
- 고소득가구 사교육비는 저소득층의 8.8배로 교육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,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월 7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고소득층은 사교육비로 한 달에 44만원 이상 지출 하나,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는 월 5만원으로 전년 대비 23.6%나 감소하여 소득수준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2015년 6.4배에서 지난해 8.8배로 증가
  - 지역별 격차도 크게 나타나 서울이 35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은 경기도와 대구 순으로 높은 반면,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남
- 경기도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'월 27만 9천원'으로 4년 연속 증가하였고, 별도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84%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  - 경기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6년 253천원에서 2014년 26만원, 2015년 26만 5천원, 지난해 27만 9천원으로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한편, 경기도 도내 3만880가구 대상으로 실시한 [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]\*\* 결과에서 경기도 가구의 84%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, 1인당 45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\*교육부·통계청 「2016 초·중·고 사교육비 조사결과」 : 전국 초중고교 1,483개 학교의 학생 4만8천여 명 대상으로 조사

\*\*경기도는 지난해 8월 29일~9월 12일에 '2016년 사회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는 경기도청 홈페이지(http://www.gg.go.kr/강통계) 통계보고서(사회조사)에서 확인 가능



그림출처 : 통계청, 「2016 초·중·고 사교육비 조사결과」

- 성균관대 사교육혁신교육연수소의 2015년 기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의 사교육절감 조사에 따르면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40만 6천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
  - 다만, 방과후학교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부족해 수강자체가 어려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

#### 02 경기도 시사점

- 출생아 수 감소 및 그에 따른 학령기 아동감소에 따라 유휴 학교 시설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하는 등 서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도 교육정책 전개 필요
  - 지난해 방과후학교 예산편성률은 평균 54%에 불과하고, 경기도는 30%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등 공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노력이 필요\*\*\*

\*\*\*방과후학교 사업은 2008년부터 지방양성이 결정돼 교육부는 각 시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을 방과후학교 예산에 포함해서 내려 보내 진행

02

# 사도/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## 1. 지역별 상하수도 공급률 현황

오는 3월 22일 '세계물의 날'을 맞아, 물 복지 차원에서 지역별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 현황을 전국 광역시도별, 경기도 기초시군별로 비교하여 제시

-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8.8%(2015년 말), 하수도 보급률은 92.5%(2014년 말)이며, 아직까지 도농 간 보급률 격차가 크게 나타남\*
  - 상수도 보급률은 98.8%로, 독일(99.3%), 영국(99.6%), 프랑스(100%) 등 유럽 주요국가 수준에 근접했으나, 농어촌(면지역)의 보급률은 2016년 기준 76.3%에 불과\*\*
  - 하수도 보급률은 92.5%로 독일(97.3%), 네덜란드(99.3%), 영국(100.0%) 등 유럽 주요국가 수준보다 낮은 편이며, 농어촌지역 보급률도 65.9%에 불과
-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8.6%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번째, 하수도 보급률은 93.7%로 8번째 수준에 불과\*\*\*
  -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게 상·하수도 보급률 100%를 달성하였으며, 상·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(상수도 보급률 93.1%, 하수도 보급률 72.7%)임
- 도내 시군별로는 수원·안양·부천 등을 비롯한 25개 지역의 보급률이 95%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, 광주·양평·포천은 상수도 보급률이 80%대에 그침
  - 하수도의 경우 수원·구리·평택의 보급률이 99~100% 수준으로 높고, 파주·포천·가평·동두천·오산·안성·화성·김포·양주는 하수도 보급률이 60% 미만에 불과

〈표〉 도내 31개 시군 상·하수도 보급률

	상수도(2015)	하수도(2014)		상수도(2015)	하수도(2014)
경 기	98.6	93.7	안 성	98.1	63.1
가 평	90.5	68	안 양	100.0	80.8
고 양	99.6	71.5	양 주	98.3	56.5
과 천	99.7	97.7	양 평	89.3	71.5
광 명	100.0	89.7	여 주	96.3	88.5
광 주	89.5	92.2	연 천	94.8	76
구 리	99.9	100	오 산	100.0	66.9
군 포	100.0	97.9	용 인	98.7	84.9
김 포	92.7	60.2	의 왕	99.9	74.7
남양주	100.0	96.4	의정부	99.8	95
동두천	99.7	67.7	이 천	97.7	87.3
부 천	100.0	85.2	파 주	98.5	69.9
성 남	99.9	91.3	평 택	98.1	99.3
수 원	100.0	100	포 천	80.3	69.5
시 흥	99.9	84	하 남	98.0	84
안 산	99.9	97.7	화 성	99.2	62.1

- 최근 들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'지역주민의 물 복지'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
  - 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예방하고 급수 취약계층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, 또한 수질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모두 물 복지의 범주에 포함
  - 부산시는 올해를 '부산형 물 복지 원년'으로 선포하고 145억 원을 투입해 노후배관 교체·옥상 물탱크 철거 및 수도물 연결·맞춤형 음수대 무료설치·수도물시민평가단 운영 등 추진\*\*\*\*
  - 김해시에서는 강변여과수 개발 및 공급·수급자 상수도 인입비용 지원·주택 누수탐지비 지원 및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·단수정보 문자발송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\*\*\*\*\*

\*환경부 보도자료 (2017.2.14.)

\*\*상수도보급률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외 마을상수도,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 수치

\*\*\* 「2015 상수도 통계」, 「2014 하수도 통계」

\*\*\*\*파이낸셜뉴스 (2017.3.5.) "깨끗한 수도물 드세요... 부산시 물복지사업 호응"

\*\*\*\*\*경남매일 (2017.2.14.) "김해 다양한 물 복지 펼친다"

# 03

## FACT CHECK

### 장사정보시스템, 합리적 선택정보 제공하나?

-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부터 e-하늘 장사정보시스템\* 서비스 모바일 제공 시작
  -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회원가입 없이 전국 화장시설의 예약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·예약하고 장례시장 임대료, 장례용품, 수수료 등 각종 가격정보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례식장, 봉안시설, 자연장지, 묘지 등 위치정보를 제공
  - 정부는 e-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경제적인 '작은 장례' 문화 확산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그러나, e-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판단기초가 되기에 2%부족
  - 한국소비자원\*\*이 병원장례식장 10곳을 대상으로 'e-하늘장사정보시스템' 내 정보와 실제 장례서비스·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, 가격정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  - 식사·음료 관련 가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, 장례식장 가격표와 'e-하늘' 제공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, 'e-하늘'을 통한 장례식장간 가격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
- 정부의 정보제공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격정보 관련 법령 준수 및 장례식장간 가격비교를 위한 가격정보 제공항목 표준화 등이 필요
  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의거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한 각종 행위별 수수료,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,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,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게시하고 각 항목별 가격은 최고가격과 최저 가격을 반드시 입력하여 선택의 폭 확대
  - 게시내용과 실제간 차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시 과태로 부과 엄정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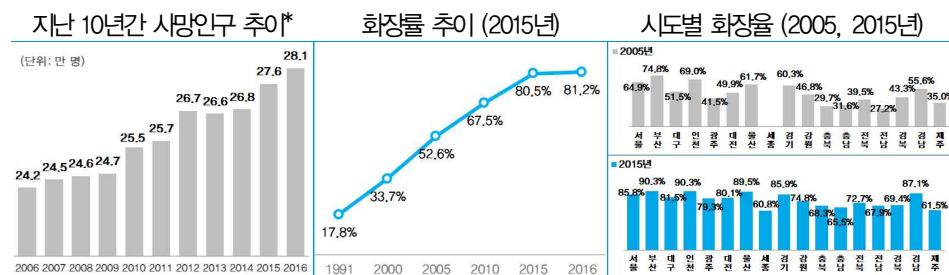
\*장사등에 관한 법률(2015.1.28. 신설) 제33조의2(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·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·이용·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\*\*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(2016.10.19.)

# 04

## 통계로 보는 복지

### 한국의 사망인구와 화장률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(왼쪽) / 2016년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문화 통계(가운데·오른쪽)

- 지난 10년간 사망인구는 '06년 24만 2천명에서 '16년 28만 1천명으로 대략 16% 증가
  - 2016년 사망인구는 28만 1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,169만6,216명의 0.54%에 해당
- 2016년 4월 기준 우리나라 화장률은 81.2%로 지난 '91년 17.8%에서 급격히 증가
  - 「2016년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문화 통계」에 따르면, 전국의 화장률은 '91년 17.8%에 불과했으나, '05년에는 52.6%로 화장이 매장 비율을 추월
-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·인천(90.3%),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(60.8%)
  - 그 외 울산 89.5%, 경남 87.1%, 경기 85.9%, 서울 85.8%, 대구 81.5%, 대전 80.1% 순
  - 10년 새 화장률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(40.7%)·충북(38.6%)·광주(37.9%) 등임

\*2016년 사망인구는 잠정치